

GAP약용작물 생산이력사항 '한 눈에'

생협, 모바일 이용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추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식품위해요소를 생산 및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GAP제도의 핵심은 생산이력 관리. 따라서 약용작물 GAP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생산자단체로서 GAP인증기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력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약재는 특히나 식품으로 수입된 약재가 국산과 혼용 유통됨으로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폐단이 많아 생산이력관리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재배과정은 물론이고 수확 후 가공, 포장, 유통단계별 관리사항을 기록해서 자료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생산자들의 고령화와 협회조직의 관리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속에서는 이같은 생산이력관리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모바일(핸드폰)을 이용해 생산이력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한약재가 생산 수확, 가공, 유통되기까지 각 단계에서 구입처, 판매처 등 기록을 보관 관리하여 정보연속성을 확보하고, 식별기호를 사용해 식품과 정보의 추적과 소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생산농민이 재배과정에서의 사항들을 핸드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력관리내용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유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생산자가 출하, 유통, 판매상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또 소비자가 필요한 생산, 유통, 판매 이력정보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

모바일을 활용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특징은 보급 조차 간편한 모바일폰에 장착된 리더기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킨 점과 공간 거리 장벽에 관계없는 무선통신으로 작업의 질, 속도, 효율성, 편리성,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이력기본정보와 바코드를 담은 라벨도 포장단위 부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3억원을 예산 편성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등 록양식, 기준, 식별표시 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생산이력제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과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생산이력제 본격시행을 위한 시스템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국내 기준이라면 GAP는 Codex, FA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확대 및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02.9월 GAP 도입을 결정, 시범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GAP제도 이해 미흡으로 지난해만도 참여농가 357명중 33%인 118농가가 중도탈락 했으며 GAP 확대를 위한 홍보부족으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가 미흡, 판로가 아직은 불안정한 현실이다.

(문정희)

생산이력추적제란?

생산이력관리란 재배과정에서부터 수확, 가공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이력사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해당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상품의 생산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구매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원산지 와 생산자, 가공지는 물론이고 제초제와 살충제는 언제 얼마만큼 투여하고 어느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GAP 농산물 외에 한우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생산이력추적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엔 토종닭이 생산한 계란껍질에 생산한 닭의 번호와 생산일자 등 생산이력을 새긴 뒤 판매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식품의 안전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생산이력제가 의무화된 소고기에 이어 쌀과 채소에도 생산이력을 표기하도록 일본농림규격(JAS)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생산자·수입자·검사자표기 및 검사필증부착 의무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한약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자를 기재하는 '한약유통 실명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3차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열고 소비자가 한약을 구매할 때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여부 등 해당 한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약유통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제조품목 69종과 정밀검사 품목 95종 등 모두 98종을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현행과 같이 의약품 용도로 수입되는 한약재를 품목별로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중금속·잔류농약),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한약규격품 제조업소는 수입하는 한약재에 수입원과 검사필증(자체검사필증 또는 위탁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한약재를 한약도매업소에서 구매해 포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와 통관과정에서 검사한 결과(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를 부착하되, 광물성·동물성 한약재는 관능검사만 실시하므로(녹용 등 정밀검사품목은 예외) 이들 한약재를 포장하는 때에는 수입자만 기재하면 된다. 국산한약재는 규격품 포장시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를 기재해야

하며 검사기관(제조업소 포함)에서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필증부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한약유통 실명제' 대상 품목 98종 이외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 단순포장약재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 위·변조가 우려되는 인삼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하고 대한약전 제8개정에 따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생약협회는 의견을 통해 "인삼의 경우 이미 인삼산업법에 근거하여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기관을 받아 유통하고 있으며, 등급제 및 생산자표기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삼을 위·변조 우려 품목으로 묶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게 한다면, 국내 인삼산업에 미치는 파장 및 농가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행 인삼산업법에 근거하여 검사를 필한 인삼은 규격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조업소를 거치지 않은 국산한약재라 하더라도 규격품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할 경우,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한 경우에도 규격품으로서 자유로운 판로를 보장 해줄 것"을 촉구했다.

농림부 약용작물 정책

최근 웰빙문화 확산,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국산한약재의 수요는 증가추세다.

그러나 유통질서 문란과 품질규격, 안전성 기준 및 제도미비 등 국산한약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은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산한약재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확보를 통해 웰빙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을 목표로 우수약용작물 생산유통대책을 수립했다.

▲고품질약용작물 개발·연구강화=지난해 120과 640종이었던 유전자원을 오는 2010년까지 130과 1,000종으로 확대하고 품종도 17작물 40품종에서 22작물 54품종으로, 특히 당귀, 황기, 작약, 천궁, 오미자, 지황, 산약, 맥문동, 율무 등 10대작물의 품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약용작물 품질안전관리=황기, 구기자 등 17개 주요품목에 대해 연차적으로 18종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GAP 및 이력추적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GAP 생산품목 및 농가도 45품목 1,000농가로 확대하고 토양 및 수질검사는 물론 수확 후 안전성검사비용도 전액 국고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정부와 농협이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약용작물 계

열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안정적 재배 및 국산한약재 소비확대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판로다양화, 브랜드화 등 소비촉진홍보강화=한국생약협회, 농협, 소비자(한의원) 주관 인터넷 전자상거래 구축 확대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국산한약재를 차별화한 전문사이트를 운영하고, 한국생약협회 e-Market place에 GAP 생산 약용작물특별코너 개설과 한의 유통사업단 및 국순당 등 대량 수요처와 직거래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생약협회,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직판장도 활성화하고 우수국산한약재 특관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클러스터 사업방식으로 약용작물 생산 가공 유통기반 조성=일정지역에 특화된 생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지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약용작물산업을 혁신. 클러스터 사업예산과 기존의 관련 농림사업을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재 유통관리제도 개선=원산지표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처벌강화, 수입한약재 관리 효율화를 위해 HSK 품목 분류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현재 기타품목으로 되어있는 한약재 중 농가가 많이 재배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세분화하는 한편, 수급조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식품으로 수입되어 한약재로 유통되는 사례 방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